



OECD의 ‘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’ 주요 내용

최 원 선임연구원

-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와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가 공동으로 주체한 ‘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’에서 ‘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’라는 제목의 OECD 보고서가 요약 발표됨.
 - OECD는 동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침체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,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, 미흡한 사회복지지출, 비효율적인 조세제도 등을 거론함.
- OECD는 우리나라 고용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, 고용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정책 과제로 정년제와 여성 및 청년 고용률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함.
 - 비정규직의 노동생산성이 정규직보다 22%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은 45% 수준에 불과해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, 불평등 해소와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자제하고 비정규직의 임금, 교육,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함.
 - 대부분 기업이 근로자에게 55세 이전 퇴직을 요구함에 따라 노년 빈곤층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, 기업들의 정년제 개선을 통하여 고령화의 악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 - 여성 및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축소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육아휴가와 보육수당 등의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.
- 한편, OECD는 한국의 양극화 확대 방지를 위하여 선별적 복지의 확대와 세제(稅制)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언급함.
 -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한국의 경우 0.306으로 OECD 평균 0.315보다 낮으나, 전체 소득 중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4.4%로 OECD 국가 가운데 9번째로 높음.

- 또한 한국은 노년층 빈곤율이 45%로 OECD 평균 13%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고 근로수입이 없는 노년층 빈곤율도 70%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.
- OECD는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빈곤층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,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지출 증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급증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선별적 복지지출 확대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함.

(OECD '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' 첫 발표, 동아일보 등, 6/22)